

국힘, 아빠 출산휴가 한달로...민주, 두 자녀 24평 임대주택

여야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경쟁
육아휴직급여 60만원 인상
8~17세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
셋째 낳으면 현금 1억원 지원

여야가 앞다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양당은 육아와 내집 마련 지원 정책은 물론 저출생 문제 전담 부서 신설 등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18일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 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리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 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 월 급여는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현행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저출생 종합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 50%를 깎아 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는 8세-17세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봄비 돌봄 수당도 확대했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관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나도 586...민주화 운동이 잘못도 아니고 자를 이유인가”

“총선 151석, 원내 1당 목표
자객공천없이 공정하게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당내 '86' (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용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며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586은 86의 다수 연령대가 50대이던 시절 쓰던 용어다. 그는 웃으며 “나도 586인데”라며 “다만 그 586 정의에

해당하지 않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 “우선은 원내 1당, 151석이다. 우리의 목표는 되게 절박하게 51% 하는 것”이라며 “내 편이나, 네 편이나는 그다음 문제다. 전쟁터에서 ‘내가 빵 먹고 내가 밥 먹을까’가 중요하나 이기는 게 중요하지”라고 강조했다.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조기 통합 선대위’를 띄우고 공천까지 말기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며 “시스템으로 보장되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 통합 방안과 관련해 “모든 선거는 갈

등이 있다. 시그리프치 않게 할 수가 없다”며 “혁신과 통합은 대척점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혁신하지 않아도 지고 원심력이 작용해도 저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공천’ 논란에 대해선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라며 “지금 공천을 했다.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비명계에 대한 별칭인 ‘수박’ 등 막말 논란에는 “오즘은 많이 귀찮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민주 ‘이재명 1cm 열상’ 작성 총리실 직원 고발

“상처 부위 축소 허위 공문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파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태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cm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cm’에서 ‘1cm’로 축소됐다고 문제 삼았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장’ 등의 표현도 추가됐으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행사 경호원에 끌려나간 강성희 의원...野 “누가 직언하겠나” 비판

경호처장 파면 등 문책 요구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간 것을 두고 진보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까지 야권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 심기에 그렇게 거슬리게 들렸느냐”며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하고 엄중한 일로,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대낮에 국민의 대표를 이렇게 막 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아닌 황제로 군림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통치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 대국민 폭력 사

태”라며 “윤 대통령의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며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했을 뿐인데 경호원들이 나를 행사장 밖으로 내몰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강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한 손을 놓아주지 않고서 본인 쪽으로 당긴 데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며 “경호상 위해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퇴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